

# 중견기업 킬러규제 접수 안내

안녕하십니까.

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련)가 중견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·환경·노동·신산업 등 분야별 "킬러규제"를 집중 발굴합니다.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.

- 문의/회신 : 산업정책팀 배유정 책임(02-3275-2990, [byj@fomek.or.kr](mailto:byj@fomek.or.kr))

## ※ 참고 : "킬러규제"란?

- 대통령의 킬러규제 개선 지시\*를 계기로 킬러규제 발굴·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 '킬러규제혁신TF' 발족 (7.5, 관계 부처 및 중견련 등 경제단체 참여)

\* "기업인들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, 즉 킬러규제(Killer Regulation)를 짹 짹 걷어내라"

(클릭→) [정부, '킬러규제혁신TF' 발족...환경·노동 규제-한국만 있는 규제 발굴](#)  
[정부, '킬러규제' 15개 선정...이르면 다음 달 개선 방안 발굴](#)  
[중견련, 지역 중견기업 성장 막는 '킬러규제' 발굴한다](#)

- TF는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①입지·환경·노동 등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, ②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등을 킬러규제로 발굴,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

### <킬러규제 예시>

- ① (입 지) 산단 관련 법률·시행령과 하위 세부규정 불일치로 입주업종 제한  
 (환 경)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 부족  
 (노 동) 고용허가제 등의 외국인력 활용 규제로 기업의 인력 활용 제한
- ② (금 융) 첨단주력산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-비금융 융합서비스 필요

### <중견기업 킬러규제 사례>

-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
- 지방 소재 및 뿌리 기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
-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
-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전기·열사용 등 간접배출 제외
- \* 기타 개별기업 입지·환경 규제

## 응답자 정보

기업명		법인번호	
성 명		부서/직위	
연락처		이메일	

## 킬러규제 접수

● 제목 :

● 소관 부처 :

● 관련 법령(규정) (\* 관련 근거 법령 조항 (예)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)

○

● 현황 및 문제점 (\* 관련 규정, 문제점 및 불편사항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 등을 상세히 작성)

○

○

○

○

● 개선 건의 (\* 해당 애로의 합리적인 개선 건의(안) 작성, 정성적 효과 및 정량적 효과(시간·비용절감, 고용확대 등) 포함)

○

○

○

-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-

## **참고** 작성 예시 (샘플)

### 1) 제목 :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#### ● 소관 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

#### ● 관련 법령(규정)
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#### ●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은 전 세계 1위이나, 충전 인프라 구축이 차량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용자 불편 초래
- 개발제한구역(GB)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확보가 어렵고, 도시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
-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거나 부지확보 및 설비·기자재 등 주요부품 수입에 초기 비용 부담이 막대하여 민간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
  -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더라도 수소구매비, 유지관리비, 인건비, 각종 재세공과금 등 운영비 부담이 커 충전소 운영 포기 사례 발생

#### ● 개선 건의

- 수소충전소 설치 시 민간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(現 50% → 案 70%)
-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융자 및 세제지원 확대

## 2) 제목 : 유턴기업 지원 확대

### ● 소관 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

### ● 관련 법령(규정)

- 해외진출복귀법

### ● 현황 및 문제점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'13년부터 유턴기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유턴 실적은 총 108개사로 부진
- 유턴기업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 활용에 한계
  - 한국은 국내투자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반면, 미국·EU 등은 해외아웃소싱의 국내화, 해외인소싱의 국내아웃소싱,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 전환 등 광범위하게 인정
  - 유턴 후 동일 업종 유지, 사업계획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 경영환경에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한계
- 세제지원이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실효성 감소
  - 유턴 초기에 공장 신·증설 등 투자비용은 많고 소득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감면기간(5년 100% + 2년 50%)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 유턴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어려운 실정
  - 실제로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 규모는 '14~'18년까지 15건 약 15억원이었으며, 관세감면 규모는 '14~'19년까지 28건 약 3억원에 불과
- 수도권은 유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공장 신·증설이 어려워 유턴 수요와 입지지역 간 불일치 발생

## ● 개선 건의

- 유턴기업 대상 업종을 전업종(사행산업 제외)으로 확대하고, 국내 생산 또는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도 유턴기업 인정요건으로 확대
-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
- 유턴기업의 경우 수도권 공장 신·증설 허용